

축산식품 관리 행정 일원화방안에 대한 건의서 제출

〈전국 축산단체〉

최근 축산행정의 기능중 축산식품의 제조 관리행정 일부업무의 보사부이관 검토실이 있어 정책 전환과정에서 시행착오로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전국축산 단체에서는 이의 신중한 검토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본회와 양돈협회(회장 전동용), 육가공협회(회장 김동근), 대한수의사회(회장 전동용), 수의학회(회장 전윤성), 낙농육우협회(회장 유운수), 수의공중보건학회(회장 이원창), 종축개발협회(회장 황영구), 축산학회(회장 김동암) 등 9개 단체 공동으로 정책건의한 건의서 취지는 식품관리행정의 일원화조치가 오히려 다원화되지 말아야하며 정책의 개선이 현실여건으로 타당성있는 방향으로 추진돼 생산자(농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어야 하겠다는데 있다. 건의서 전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제점과 우리의 견해

(1) 정부시책에 대한 불만감 조성우려

축산식품의 생산은 축산업을 하는 120만 농민들 인바 그들의 생산품인 축산물의 관리는 현재까지 축산시책의 일환으로서 축산인을 보호하고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되어 왔음은 기지의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보건사회부로 소관사항이 이관되어 국민보건위생관리행정의 일원화의 측면에서 축산식품을 취급한다면 이는 생산자와 생산과정을 외면하는 결과가 되며 그들의 피해는 막대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축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그들의 불만요인을 유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2) 축산물 수급조절의 차질초래

축산진흥정책은 축산물 수급의 원활한 조절로 축산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적정량 생산 및 공급을 기하며 나아가 적정가격을 유지시킴으로서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보건사회부의 행정기능으로 보아 축산물 수급의 조절과 국민 보건관리를 동시에 수행해 나아가기란 지난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더욱이 상반된 입장에 있는 생산자인 농민과 수요자인 국민을 동시에 보호하기란 곤란하며 오히려 양측에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구축한 축산기반인 복합영농시책 수행에 차질을 초래시킬 가능성이 있음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2) 행정조직과 기술요원확보에 대한 대비책 미비

축산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그 특수성에 비추어 양측가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그 관리가 기술행정수행상 절대적조건인 기구와 장비 및 전문기술자의 확보와 근본적 대비책이 전제되지 않은 시책과 개선은 오히려 행정의 다원화와 시책의 조령모개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즉 목장위생(생축, 시설, 착유, 집유, 수송)에서부터 생산과정위생(도살, 처리, 가공, 규격, 냉동, 냉장)에 이르기까지는 일관성있는 과정으로서 이는 교육법에 의하여 전문지식을 이수한 요원이 관리함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한 이들은 산업발전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생축의 관리, 지도와 수급조

절등에 활용되고 있는바 일부업무만이 이관된다함은 일원화조치가 아니고 위생관리업무를 양분하는 결과만을 초래케되어 기술요원의 이중배치와 연계성없는 위생관리가 불가피하게 됨으로 인하여 국고의 낭비를 가져오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기술자의 확보난으로 축산식품의 보다 위생적인 관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의 미비

모든 식품관리란 그 식품의 생산단계는 물론 가공, 수송, 저장, 판매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 원칙(WHO의 정의 참조)이며 특히 인수공통전염병등 공중 위생학적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 축산식품의 경우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식품전반을 다루는 보건사회부에 그 업무가 이관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물론이려니와 일부단계(생산 및 도축과정)는 현행대로 농수산부 소관으로 하고 제조가공단계나 유통판매단계에서만 보건사회부 소관으로 구분하여 취급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전환한다면 일원화가 아니라 현재의 이원화에서 오히려 다원화되는 결과를 초래시키게 될 것임은 당연한 일이며 과학적이고 위생적 취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예: 육가공장의 경우 동일한 작업장내에서 생산축을 계류, 도살검사까지는 농수산부의 축산물 검사원이 관장하고 제조, 가공 및 유통과정은 보건사회부에서 관장케 될 경우).

(5) 관계공무원 및 전문직인에 대한 무시감 초래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30여년간 관장하여 오던 행정업무와 관계 전문직인(수의사 및 축산분야)의 기술적분야의 전통성을 무시하고 일시에 시책을 전환하다는 것은 해당분야의 전문직인의 사기저하는 물론 특수기술분야적의 고유업무들 일시에 정지시키는 결과가 되며 따라서 이들로부터 올 불만요인과 불신감 조성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축산식품 및 시설의 지원대책

현재까지 농수산부에서 관장하여온 축산식품의 위생관리는 생산자보호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제품의 질적향상과 위생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유치리, 육가공, 육가공시설등 거의 대부분이 지

원산업으로 선진외국에서 도입되어 국제규격에 의하여 처리가공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수준으로서 세계은행이나 선진국 위생당국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생산되는 제품역시 주한외국인이나 세계각국에서 내한하는 관광객이 일류호텔등에서 널리 이용할뿐만 아니라 합자등에 의한 제품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 비하여 그 소비가 적고 제품의 단순성으로 앞으로는 제품의 다양화와 규격 등 검사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보사부로 업무가 이관시 이러한 시책의 결여와 위생관리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음으로 현재 제하에서 계속적인 지원시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건의요약 및 결론

이상의 문제점과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들의 견해를 건의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1) 행정의 일원화는 어느 한 부서에 전체의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며 일부 제조가공허가 업무만을 관장하면 다원화 될 조치가 될 것입니다.

(2) 축산업의 발전과 농촌생활안전에 저해요소를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시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축산인인 농민이나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책이 어느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시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관계공무원이나 전문직인의 피해를 주지 않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불만이나 불신요소가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5) 끝으로 국민보건증진과 국민경제안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부조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밖에 건의서에는 축산식품 제조업 허가업무 보사부로 이관시 문제점 △합리적 수급조절 가격관리 애로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시 부처간 의견차이 △축산진흥정책의 원활한 수행 어려움 △소비자 보호 및 축산업 발전 저해 △축산가공품 수출입 지장 △가축방역업무 공백초래 등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참고자료로 ① 현행 정부관련부서 기구표, ② 행정 지도 검사 기능 대비표 ③ 축산식품 관리의 외국에 ④ 식품위생 관리의 원칙적 개념(W. H. O 정의) 등을 제시했다.